

2012. 12. 4.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2년 12월 4일(화) 13:00 배포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KDI 홍보팀

TEL 02) 958-4030 FAX 02) 960-0652 E-mail press@kdi.re.kr

G20 국제정책자문그룹 워크숍 저성장에 직면한 세계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

The Shadow G-20 Workshop of the International Policy Advisory Group:
Confronting the Challenges of Slow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기간: 2012년 12월 3일(월)~4일(화)
- 장소: 신라호텔 영빈관 에메랄드홀

□ KDI와 콜럼비아대학교 산하 지구연구소(Earth Institute)는 12월 3, 4일 양일간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한국수출입은행이 공동 주최하는 「G20 국제정책자문그룹 워크숍」을 주관, '저성장에 직면한 세계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 무역 자유화와 지역 통합, 금융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 촉진을 위한 범세계·지역·국가적 차원의 실효적 정책 방안을 모색함.

- 아시아개발은행과 지구연구소는 2008년 G20 정상회의 출범을 계기로 2009년 9월 국제정책자문그룹(International Policy Advisory Group, IPAG)을 구성하여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 기획재정부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중 한국수출입은행이 총괄하는 국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IPAG 프로젝트를 지원

○ KDI는 한국측 IPAG 참여기관으로 선정, 아시아개발은행 및 지구연구소와 공동으로 '아시아 관점에서의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정책' 프로젝트를 진행

○ 특히 이번 워크숍은 자국 및 세계 경제를 둘러싼 경제·개발 이슈에 대한 아시아 정책입안자들의 이해 제고와 정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IPAG은 지난 해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아시아 및 G20 개최 지역에서 총 다섯 차례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연구 및 논의 결과를 정리한 연차보고서를 통해 G20, ASEAN, ASEAN+3, 동아시아 정상회의, APEC 등의 협의체에 선제적 어젠다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숍에는 쿠로다 하루히코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와 제프리 삭스 콜롬비아대학교 교수 겸 지구연구소 소장이 원격 화상으로 참여하며, 이종화 국제경제보좌관, 이완 이지스 아시아개발은행 지역경제협력국장, S. 찬더 아시아개발은행 지역·지속성장개발국장, 치아 시오 위에 싱가포르 국제관계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윙 타이 우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교수를 포함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유럽, 미국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함.

❖ 문의: 임원혁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02-958-4206)

양은원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경제연구실 연구원(02-958-4279)

❖ 첨부 1. 프로그램

❖ 첨부 2. 세션 별 발표 및 토론 요약

❖ **첨부1. 프로그램**

첫째 날. 12월 3일(월)

시 간	일 정
08:30 ~ 08:45	개회식 개회사 임원혁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
08:45 ~ 10:45	세션 1.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 좌 장 이완 이지스 아시아개발은행 지역경제통합장 발 표 1.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학교 지구연구소장 발 표 2. S. 찬더 아시아개발은행 지역·지속성장개발장 발 표 3. 오형나 KDI 연구위원 발 표 4. 워릭 맥키빈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11:15 ~ 13:00	세션 2. 국제무역에 대한 논의 좌 장 임원혁 KDI 글로벌경제연구실 실장 발 표 5. 시게유키 아베 도시사대학교 교수 발 표 6. 치아 시오 위에 싱가포르 국제관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발 표 7.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
14:30 ~ 16:15	세션 3. 유럽 경제상황에의 교훈 좌 장 워릭 맥키빈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발 표 8. 찰스 위플로스 제네바대학원 교수 발 표 9. 라스 오농 스웨덴 재정정책위원회 위원장 발 표 10. 앤위 나수티온 인도네시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 표 11. 도날드 한나 포트리스투자그룹 매니징디렉터

시 간	일 정
16:30 ~ 18:30	<p>세션 4. 국제 불균형에 대한 논의</p> <p>좌 장 시게유키 아베 도시사대학교 교수</p> <p>발 표 12. M.S. 바우티스타 아시아개발은행 수석경제자문가</p> <p>발 표 13. 위용딩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장</p> <p>발 표 14. 윙 타이 우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캠퍼스 교수</p> <p>발 표 15. 레이레이 송 아시아개발은행 수석경제학자</p> <p>발 표 16. 임원혁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p>

둘째 날. 12월 4일(화)

시 간	일 정
08:30 ~ 10:30	<p>세션 5. 세계성장 동력으로써의 아시아 전망</p> <p>좌 장 레이레이 송 아시아개발은행 수석경제학자</p> <p>발 표 1. 이완 아지스 아시아개발은행 지역경제통합국장</p> <p>발 표 2. 제인 폴리 호주국립대학교 중국연구소 어소시에이트디렉터</p> <p>발 표 3. 차이 팡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장</p> <p>발 표 4. 칸하이야 싱 응용경제연구협의회 선임연구원</p> <p>발 표 5. 이종화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p>
10:45 ~ 12:45	<p>세션 6. 아시아 경제 통합 현황과 전망</p> <p>좌 장 윙 타이 우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캠퍼스 교수</p> <p>발 표 6. 마사히로 카와이 아시아개발은행연구원장 겸 CEO</p> <p>발 표 7. 칼리아파 칼리아한 호주국립대학교 교수</p> <p>발 표 8. 김화 림 말레이시아 패낭연구소 연구위원</p> <p>발 표 9. 리칭 장 재무경제중앙대학교 재무학과 학장</p> <p>발 표 10. 한진희 가천대학교 교수</p>

❖ 첨부2. 발표 및 토론 요약

세션 1. A Plan for en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

“Role of Asia on Mitigating Climate Change”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아시아의 역할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학교 지구연구소장

-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포괄적 논의보다는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경제성장과 에너지 수요 증가 추이와 에너지 효율 제고 효과의 한계를 감안할 때 이산화탄소 농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 뿐임.
-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서는 저탄소 에너지원의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특히 태양광과 풍력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야 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원자력과 바이오연료도 고려해야 함.
-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탄소의 가격을 매기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용한 기술적 대안을 활용하여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정부는 녹색성장 분야의 리더로서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이끄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임.
 - 녹색기후기금(Global Climate Fund, 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의 역할이 중요
 -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의 녹색기후기금 마련을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톤당 고소득국에 \$5, 상위 중소득국에 \$2.5, 하위 중소득국에 \$1.25을 부과하고 저소득국은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음.

“Perspectives of Asian-Pacific Region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시각

S. 찬더, 아시아개발은행 지역·지속성장개발국장

- 지금까지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자원사용량의 증가는 필연적이었으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위한 해법의 전면적인 변화가 요구되며, 녹색성장이 답이 될 수 있음.
 - 녹색성장은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의 조화로운 균형을 지향하는 국가발전정책으로, 경제정책의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동시에 환경 친화적이어야 함.
 - 각국의 경제성장 단위당 자원사용량(resource intensity per additional unit of GDP)은 최대 30배가 넘는 차이를 나타냄.
 - 중국과 인도는 9.0에 달하는 반면, 일본은 0.3 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기후변화는 각국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으로,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체제 확립이 시급함.
 - 아시아 지역이 녹색성장을 통한 지역 발전 사례를 제시함과 동시에 북미·유럽에 비해 발전되어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녹색성장정책에 접목한다면, 녹색 성장 관련 논의를 한 차원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민간 기업을 활용한 역내 녹색성장 이니셔티브 추진을 통해 도미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Green Growth and Climate Action Policies in China, Japan and Korea “한국, 중국, 일본의 녹색성장 정책 효과분석”

오형나, KDI 연구위원

- 한·중·일의 무역통계를 살펴보면, 비환경 관련 품목에서는 중립적인 패턴을 보이는 반면, 환경 관련 품목에서는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3국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은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 안정적인 선진경제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은 아직 중진국 범주에 속해있으며, 최근 중진국 진입을 이룬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없음.

- 본 연구는 마츠야마(1972)의 ‘소규모 개방경제하 내적 성장이론’을 중심으로 녹색부문의 성장속도가 기존 부문보다 높은 경우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녹색성장정책이 대체로 타당함을 발견
 - 농업, 자원 등 기술 변화가 없는 전통부문과 제조업과 같이 경험에 의한 교육효과(learning-by-doing)로 인해 생산을 많이 할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 신생부문이 병존하는 경우의 자원 배분과 경제성장 간 관계를 분석
 - 마츠야마에 따르면 교역이 없는 일국모델에서는 전통부문의 성장이 신생 부문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하나,
 - 글로벌 경제에 비해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의 경우, 외적 또는 내적 생산기술의 진보가 국경 밖으로 이전되지 않는 가운데 국제무역에서 전통부문의 상대적 우위가 특화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생부문으로의 자원배분을 차단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 마츠야마 모델은 환경쿠즈넛(Environmental Kuznets Curve), 빈곤의 덫(poverty trap),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 현상 등을 설명하는데 사용됨.

- 그러나 한편, 대규모 개방경제, 또는 기술의 파급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일국모델과 유사하게 전통부문의 자본축적이 신생부문의 기술진보에 활용됨으로써 경제 전반의 발전이 일어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전통 부문을 일반적인 제조업으로, 신생 부문을 녹색 산업으로 대체, 녹색성장 정책의 타당성을 설명함.

-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녹색부문보다는 전통 제조업부문에서 상대적 우위를 가지는데, 만약 정부가 1)인위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녹색부문의 생산을 높이거나, 2)전통부문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에 과세함으로써 비녹색부문의 한계수익을 낮추거나, 3)교육을 통해 환경친화적 소비를 창출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균형점에서 벗어나 경제가 위축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녹색부문의 생산을 증가시키는데 일조하면 장기적으로는 녹색부문의 생산성을 제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임.
- 한국, 중국, 일본 무역통계를 이용한 실증모델에서는 환경재 수출이 비환경재 수출에 비해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게 나타남.
 - 이는 특히 환경산업의 경쟁력제고를 통해 수출확대와 경제성장을 추진한 한국과 중국 정책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결과
- 환경재 수출 결정 요인을 탐색하는 실증모델에서는 교토협약과 더불어 일인당 소득(환경 쿠즈넷과 관련된 변수)이 높을수록, 환경재 수요(환경재 수입을 proxy로 이용)와 저축률(자본축적 변수)이 높을수록 환경재 수출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 개방도를 나타내는 FDI 규모는 환경재수출에 별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정부의 녹색성장정책 표명에 따른 고정효과는 없거나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전세계에 대한 환경재 수출과 아시아지역에 대한 환경재 수출은 상이한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되는 양상을 보임.

“Integrating Price Mechanism into International Climate Negotiations” 국제 환경 논의에서의 가격매커니즘

워릭 맥키빈,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 최근 범세계적 환경 관련 논의는 가격 매커니즘의 부재로 표류중이거나,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그치고 있음.
-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제시된 2020년 감축 목표치를 기준으로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살펴보면, 대다수 OECD 국가와 중국은 1990년 대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인도, 브라질 등 신흥경제국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이 신흥경제국 중 유일하게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기준 년도인 1990년 당시 다른 신흥경제국에 비해 이미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었기 때문임.
 - 가격 매커니즘 반영에 앞서 각국의 실질적인 노력과 온실가스 감소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모델 구축이 요구됨.
 - ※ 예컨대, 각국의 GDP가 급성장한 시기 또는 산업화·도시화가 급진적으로 진행된 시기를 기준년도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
- 가격 매커니즘의 기본 구조에 배출량 목표치, 탄소가격의 최저·최고치 등을 포함시켜야 하며, 각국의 상이한 경제 환경 및 발전 단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별 목표치 설정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임.
 - 배출량 목표치는 기존의 교토 협약 등을 기초로 설정해야 하며,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 등의 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탄소가격의 최저·최고치(Price Collar)를 명시해야 할 것임.
 - ※ 최고치는 범세계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로서, 모든 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음.
 - 가격 매커니즘의 효율적인 반영을 위해서는 범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탄소 가격을 정의해야 함.

세션 1. 토론 요약

-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학교 교수가 언급한 원자력에너지와 풍력에너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현실임.
 - 국가 간 정치·군사적 입장 차이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에너지 개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원은 적극적으로 개발, 전 인류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채택해야 함.
 - 다양한 친환경에너지원의 개발 이후 원자력에너지나 풍력에너지의 효용가치가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해 낮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경제원칙에 의해 채택되지 않을 것임.
 - 아시아의 친환경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과 같은 거대시장의 녹색성장에 대한 높은 관심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음.
- 워릭 맥케빈 호주국립대학교 교수가 제안한 가격 매커니즘이 반영된 범세계적 환경모델은 큰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며, 이를 이끌어 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편익분석이지만, 관련한 심층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
 - 편익분석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부분의 대응책이 15~100년 이후에 나타날 효과를 위해 현재의 비용 지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모델을 구축함에 있어 GDP 대신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PPP)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음.
-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학교 교수가 강조한 과학기술 개발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탄소세 제도 구축 등의 정책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과 병행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오히려 KDI 연구위원이 언급한 쿠즈넛커브를 살펴본 결과, GDP가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한 후에야 비로소 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쿠즈넛커브에 바탕한 자연스러운 친환경정책의 발전을 기다리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범세계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개발도상국의 경우 쿠즈넛커브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친환경 정책 추진에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함으로써 쿠즈넛커브의 분기점을 앞당긴 성공 사례는 강조할 만 함.
- 세계적 차원의 환경 관련 논의에서 실질적 이행방안 모색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일본·독일 등 선진 과학기술 보유국을 중심으로 친환경 기술개발을 위한 로드맵 등은 준비되었지만, 친환경 시장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실질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은 부재함.
- 자본주의 시장 체제 하에서는 시장을 창출하는 노력이 정책설계 및 기술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 보다 효과적일 것임.
-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제 사회 상호 간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목표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범세계적인 탄소세 부과가 최선의 실질적 이행 방안이 될 것임.
- 국제 사회는 교토협약의 공식적인 발효 이후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목격했으며, 이 같은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임.
-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학교 교수의 제안을 환영하나, 재정확보 방안 및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도시화에 대비한 방안 등을 모색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국제환경모델 설계는 불가능함.

세션 2. Panel on world trade 국제무역에 대한 논의

“How Did the 2011 Thai Floods Affect the World Trade: A Preliminary Analysis” 2011 태국 홍수가 국제무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예비분석

시게유키 아베, 도시사대학교 교수

-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중심의 성장정책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룸.
 - 각국이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 숙련도가 높은 노동력을 기반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전략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 결과 현재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거대도시화 및 지역불균형발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아시아 인구 및 자산 대부분이 재해에 취약한 실정임.
- 2011년 태국에서 발생한 홍수는 순수 자연 재해라고 보기 어려움. 태국정부의 쌀 수출 진흥을 위한 무리한 수자원 관리로 태국은 홍수·가뭄에 취약한 환경으로 바뀌었음.
 - 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하드디스크 수출 물량을 살펴보면, 재해 이전의 물량을 회복하기까지 총 5개월이 소요됨.
 - 각국의 태국 하드디스크 수입 추이를 살펴본 결과, 유럽·북미 등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국가들의 수입 물량은 현재까지도 재해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 같은 인접국가로의 수출을 늘림으로써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 하고 있지만, 경제적 피해는 이미 발생함.
 - 태국의 또 다른 주요 수출 품목인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재해 이전 수준으로 수출 물량을 회복하는데 8개월이 소요됨.

○ 자연 재해에 취약한 환경으로 인해 태국으로의 초국가적 기업의 공장 이전 계획 취소되거나 태국에 있던 공장들이 나오는 사태가 발생함.

- 태국에 대한 FDI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의 경우, 기존 공장의 이전 비율은 높지 않았으나, 신규 투자 계획을 취소한 사례는 다수 발견됨.

□ 2011년 재해 이후, 태국 정부는 다양한 재해 방지 대책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중요 설비 및 기기는 2층 이상의 건물 고층에 설치할 것을 유도하고 있음.

“World Trade and Protectionism, Production Networks, and Regionalism” 국제무역과 보호주의, 생산 네트워크 및 지역주의

치아 시오 위에, 싱가포르 국제관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변화하는 국제 무역환경을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및 공급체인 증가, 지역주의 강화 3가지 측면에서 설명
- 현재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추세는 1930년대 공황 당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국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G20 국가들의 보호무역조치 제재와 완화가 요구됨.
 - 선진국들은 자동차산업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녹색 보호주의가 대두되고, 국가안보를 위해 투자분야에서도 보호주의를 확대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남.
 - 보복 가능성 등 보호주의의 위협에 대한 정보 전파·공유 및 동료 간 압박이 필요하며, 도하라운드 최종 타결 등 다자무역체계에 확실성을 부여해야 함.
- 국제무역환경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공급체인 증가로 무역·투자·서비스·지적재산권이 서로 연계되는 등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임.
 - 중간재 및 부품교역으로 인해 국제무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지역 내 부품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관세절차, 원산지규정 등 무역촉진조치의 중요성이 부상
- 무역·투자 정책을 완화하거나 운송·통신 및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등 국경 내 장벽을 낮춰 개도국 생산네트워크로의 진입 접근성을 제고해야 하며, 이는 자유시장방식과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산업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 개도국은 생산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산업화를 촉진하고 해외기술을 유입하는 한편 산업고용을 창출할 수 있으며, 선진국은 개도국의 생산네트워크를 활용해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음.

- 동아시아 지역의 RECP(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무역체제 빌딩블록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의 급증으로 국제무역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음.
 - RECP와 TPP는 협정 규모와 포함사항이 상이하며, RECP이 유연성, 경제·기술협력, 지역 연계 강화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음.
 - 향후 RCEP과 TPP가 통합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두 블록의 무역협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
 - WTO는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규정을 간소화해 최혜국대우로 인한 편차를 최소화하고 원산지규정 등 여러 규제, 기준으로 인한 '스파게티볼 효과'를 줄여야 할 것임.

“The Impact of Global Economic Recession on Trade: Focusing on 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무역에의 영향: 신흥국 및 개도국 중심으로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

- 무역의존도가 높고 전체 무역량 중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 인한 교역의 비중이 큰 신흥국과 개도국을 중심으로 최근 세계 경기침체가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논의함.

- 최근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제 무역이 감소하는 추세
 - 과거 전체 국제 무역량 중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중간재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 최근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아웃소싱이 아닌 국내산 제품으로의 중간재 대체 경향이 증가 등으로 전체 국제 무역량이 감소하는 추세

- 국제 무역에 대한 세계경기침체의 충격은 선진국보다 신흥국과 개도국에 더 심한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대체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신흥국과 개도국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무역성장 둔화가 해소되지 않고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활성화 되지 못함에 따라 교역량이 감소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됨.
 -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는 중국의 새로운 경기부양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세션 2. 토론 요약

- 자유무역협정(FTA), 지역무역협정(RTA) 등 새로운 교역체제 구축이 역내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독 모델로 분석하기보다 다른 방법론과 비교 분석할 때 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교역량이 급감한 세계경제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제품 사이클이 긴 조선업과 제품 사이클이 짧은 정보통신산업은 확연하게 다른 추세를 나타냄에 따라, 무역추세 및 세계교역량 분석 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임.
- 세계 보호무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1930년대 실정이 비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당시 세계정세는 오늘날과는 확연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환경요인이 상이한 두 시대의 경제정책을 결과론적으로 유사하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음.
- FTA와 보호무역 관련 논의 과정에서 북-남 경제관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만, 현실에서는 남-남 협력구도, 역내 경제협력관계 등 다양한 경제협력체제가 존재하며, 세계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역내·외 협력구도 간 상호연계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됨.
 - 현재와 같은 추세로 신규협력관계가 새롭게 구축될 경우, 세계 경제는 '스파게티 볼' 효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
 - 남-남 협력구도의 유연성 또는 개방성이 북-남 협력구도와 비교해 높지 않고, 오히려 북-남 협력구도가 개발도상국에 유리할 수 있음.
 - 한·중·일 동아시아 3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기술개발 노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정부는 최근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에 참석,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경제학자들 특유의 정치·경제 분야 분리 원칙으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비교 분석 과정에서 중국·일본 간 정치적·외교적·경제적 관계가 각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진행되지 못함.

- 태국 홍수 재해 이후 대기업 고위인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 거시적 차원의 시각과는 대조적으로 미시적 차원의 역내 생산네트워크는 일정 수준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세션 3. The European Economic Situation: Lesson

유럽 경제 상황에서의 교훈

“Economic Situation in Europe: Since Then” 유럽의 경제상황과 그 이후

찰스 위플로스, 제네바대학원 교수

- 경제 정상화를 위한 유럽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재정 건전성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더 깊은 경기침체로 접어들고 있음.
 - 재정 적자와 누적 공공부채의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EU차원에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재정협약’ 기반 긴축정책이 유럽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제시되었으나,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가들이 차례로 붕괴되면서 긴축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유럽 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가까운 시일 내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보일 정도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여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가운데 EU의 무리한 긴축재정에 대한 의문과 미국식 경기부양책 병행 추진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 유럽중앙은행(ECB)은 그리스를 포함한 유로존 국가의 공공부채 제한을 완화했으며, 구제금융 지원을 확대해 위기에 직면한 정부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면서 GDP 대비 부채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낮추는 시한도 각국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조정토록 함.
 - 그러나 부채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므로, 유로본드를 통한 부채 공동 관리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개혁 및 지출에 기반한 경기부양 정책 등을 고려, 유로존은 최적의 정책 배합에 합의해야 할 것임.

“Can Fiscal Policy Councils reduce the debt bias?” 재정정책 위원회는 채무 편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라스 오농, 스웨덴 재정정책위원회 위원장

- 본 연구에서는 스웨덴 재정정책 위원회에 초점을 맞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최근 일부 국가에서 독립적 재정정책 권한을 가진 정책위원회의 신설 사례가 늘고 있으며, 유럽 재정위기 이후 EU는 유로존 회원국에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 설립을 권고
 - 재정정책 위원회 설립 배경에는 채무 불균형 감소에 대한 기대가 있었음.
- 재정정책 위원회는 증가하는 정부 재정 적자 및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협의체로서 구상되었으며, 특히 거버넌스 구조가 약한 정부의 재정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재정정책 위원회를 포함한 채무 감소 정책의 정치적 시스템은 국가 재정 적자 및 채무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정책에 영향력을 갖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임.
- 2007년 설립 이래 스웨덴 재정정책 위원회가 제출한 재정정책의 장기 지속가능성과 소득재분배 등에 관한 연간 보고서는 정부의 예산 심의에 영향을 미침.
 - 스웨덴 재정정책 위원회는 1990년 초 경제 위기 속에서 재정문제 해결의 프레임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최초로 구상되었음.
 - 전문가는 물론 대중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스웨덴 재정정책 위원회는 탄탄한 신뢰를 확보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정당의 지원을 받고 있음.

- 스웨덴 재정정책 위원회는 재정정책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재정 정책 분석과 정책적 권고를 제시
- 재정정책 위원회는 재정 정책의 프레임워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나 정부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이는 위원회의 독립성과도 연결됨.
 - 재정정책 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고용은 물론 대중과의 토론 또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한편, 스웨덴 재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위원회 특성상 행정부의 재정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 산하로 이동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음.
- 스웨덴 재정정책 위원회는 ‘새로운 스웨덴 모델’ 창출의 과제를 수행코자 하며, 소득 재분배와 관련한 정부정책 효과 분석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음.

“Economic Policies in the Crisis Eurozone versus East Asia” 재정위기 속 경제정책: 유로존 대 동아시아

앤워 나수티온, 인도네시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수출기반경제인 동아시아의 주요 시장이자 신흥 경제지역의 투자 및 기술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유로존 수요의 약세는 아시아 신흥 시장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재정위기 이후 유럽의 경제, 정치적 상황과 위기 해결방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유럽의 정치적 교착으로 인해 유로존 스스로 은행 공황, 재정 강화, 경제 성장 둔화 등 경제 공황상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유럽 중앙은행(ECB)은 무제한적인 국가채권 매입과 유로존 은행 연합 등을 통해 유로존 국가가 경제위기를 공동으로 대처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본 발표는 유로존 경제정책과 동아시아 및 ASEAN+3 국가 경제정책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함.
 - 구조 개혁과 금융시장 발전에 관한 분석, 재정 정책, 아시아 내 외부 준비통화 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
- 첫째, 경제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유럽은 1999년 1월 통화동맹을 수립함으로써 당시 17개 회원국의 명목환율 및 통화 정책을 통일시킨 바 있으나, 아시아는 FTA를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공동시장이나 통화 동맹을 이룬 경험이 없음.
- 둘째, 금융시장 정책 개발과 관련하여,

- IMF는 통화 동맹이 유럽 재정 위기에 앞서 유로존의 금융시스템을 급속하게 통합시켰다고 진단한 바 있으나, EU는 일반 은행을 관리 감독하고, 규제를 만드는 데 여전히 한계점을 보이고 있음.
- 아시아의 경우,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통화 평가 절하와 재정 감축 등이 경제전반의 구조 개혁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은행 시스템의 개혁을 일궈 냈으나, 금융시장의 역할은 한계를 드러냄.

□ 셋째,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 유럽은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EU는 통화정책은 단일화되었으나 재정정책은 여전히 국가별로 이루어지는 한계를 보임.
- 아시아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금 경감 및 정부소비 확대 등을 통한 부양책을 사용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인프라 구축과 공공주택 부양책등을 활용함.

□ 넷째, 아시아 내 외부 준비통화(External reserve) 정책과 관련, 아시아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친 아시아 신흥국들이 신축적인 환율 시스템을 고려하는 반면 몇몇 아시아 국가의 통화는 여전히 달러화에 고정되어 있어 지역 내 국제 준비통화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International Policy Advisory Group: Lessons for Asia from the European Crisis”

유럽 경제위기가 아시아에 주는 교훈

도널드 한나, 포트리스투자그룹 매니징디렉터

- 최근의 유럽 재정위기와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간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함.
 - 유사점: 현재 유럽의 통화 통합 수준은 아니지만, 1997년 금융위기 이전에 아시아에도 준통화협정(quasi-monetary union)이 존재했으며, 현재 독일정부와 유럽중앙은행이 강조하고 있는 긴축재정정책과 유사한 예산감축 및 긴축 통화정책이 당시 미국과 IMF가 제시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포함되었음.
 - 차이점: 아시아와 달리 유럽에서는 EU라는 초국가적 정부가 모든 회원국에 통일된 거시정책을 강요할 수 있음.
- 최근의 유럽 재정위기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무리한 긴축정책으로 대응하면서 심화된 측면이 있음.
 - EU가 강력히 추진한 긴축정책을 모범적으로 도입한 국가들 및 독자적으로 긴축정책을 추진한 영국정부가 차례로 재정위기를 맞으면서 긴축재정정책 추진 논리는 유럽 안팎에서 도전받고 있는 실정임.
- 2013년 EU는 세계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더블딥 가능성을 불식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지금까지의 긴축재정정책에서 성장 위주의 경기부양책으로 선회해야 할 것임.

세션 3. 토론 요약

- 긴축재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었으나, 그 대안이 유로화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임.
 - 물가안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목표 물가를 국가별로 유연하게 채택케 함으로써, 각국의 상황에 맞는 경제정책을 시행토록 유도하는 것에는 찬성
 - 지난 2년간 유럽을 지배해온 긴축재정정책은 유럽 경제대국인 독일 정부의 제안에 의한 것으로, 유럽중앙은행의 대주주인 독일정부가 구제금융 관련 권한과 책임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독일정부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지만, 유럽 각국 정부가 재정정책 주권을 갖고 있다는 점은 변함없음.

- 세수확대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긴축정책을 포기하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궁극적인 경제 위기 해결책이 될 수 없음. 경기부양을 위해 부채비율을 무한정 늘리는 것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이 아님.
 - 세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부양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경기부양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은 반대함. 단적인 예로,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부채탕감을 위해 독일의 부채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두고 볼 독일 국민이 없다는 점이 유럽의 딜레마
 - 재정안정화가 모든 경제정책의 시작임. 물가가 안정되기 전에 재정이 우선적으로 안정화 되어야 목표 물가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정책들을 적시에 시행할 수 있음. 안정적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 및 복지정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스웨덴 재정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정책프레임워크는 환경변화에 맞춰 정책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 정책의 단기·중기·장기적 효과를 매년 분석, 발표함.
- 스웨덴의 사례는 상당부분 싱가포르와 유사하다는 인상을 받음. 스웨덴 재정위원회와 싱가포르의 재무부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임.
- EU라는 큰 우산이 형성된 이상 개인은 물론 국가 단위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견해가 존재함. 특히 부채탕감 사례가 발생한 현재, EU라는 안전장치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도덕적 해이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 경제 위기를 야기하는 외부 충격과 내부 문제를 총체적으로 규명했을 때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으나, 오늘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에는 문제점을 규명하는 노력이 부족함.

세션 4. Panel on global imbalances 국제 불균형에 대한 논의

“What's Happening to Global Imbalances”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논의

M. S. 바우티스타 아시아개발은행 수석경제자문가

- 2000년대 들어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글로벌 불균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축소된 듯 했으나, 다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0년 이후 가속화된 국제 금융시장 통합은 불균형적인 금융 산업의 발전과 전반적인 경상수지 분포 확대를 초래함.
 - 금융기업 간의 경쟁적 고객유치활동은 대출을 용이케 해, 개인의 소득 저축을 통한 부의 축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상대적으로 감소케 함.
 - 그러나 대표적 경상수지 흑자국인 중국의 흑자 규모가 금융위기 발생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불균형 정도는 2007년 이전과 같이 심화되지 않고 있음.

- 세계 경제 불균형은 미국의 낮은 저축율 및 과도한 소비와 함께 아시아·유럽의 수출 촉진 정책이 맞물리며 확대되었고, 가계부채율은 국내 금융 산업의 규모와 비례하는 추세를 보임.

“Global Imbalance” 국제 불균형

위용딩,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장

-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외채 위기 가능성에만 집중하느라 부채 위기를 간과함으로써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예측하는 데 실패했음.
- 글로벌 경제위기의 가장 큰 위협인 심화된 불황을 타개하려면 자산 처분을 통한 부채 탕감(deleveraging)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
- IMF의 2012년 보고서 내용과 달리, 중국의 경상수지는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중국이 큰 순채권국으로 전락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보다는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IMF 보고서는 현재 중국의 구조 조정이 외부적인 변수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의 감소가 중국의 '재균형(rebalancing)'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2013년도에는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함.
- 하지만 아래의 네 가지 요인으로 미루어 볼 때, 2013년도에도 여전히 중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첫째, 2005년 이후 30%에 가까운 위안화 평가 절상은 중국의 재균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둘째, 중국의 빠른 임금 상승은 노동집약산업에 강세를 보여 온 중국의 시장 경쟁력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셋째, 중국이 사회보장시스템 재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예비적 동기의 저축(precautionary saving) 또한 감소할 것임.
 - 넷째, 무역조건의 악화로 중국의 무역수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Global Rebalancing: Cyclical or Structural?” 국제 재균형: 순환적인가 혹은 구조적인가?

레이레이 송, 아시아개발은행 수석경제학자

- 최근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리밸런싱이 진행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세계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환율 평가 절상이 여전히 필요하며, 동시에 주요 선진국의 수요 진작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지난 몇 년동안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은 중국의 근본적인 경제 구조 조정에 따른 것으로, 구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중국 내 재균형이 결국 국제 재균형을 가속할 것이라고 예상함.

“Crisis Response and Prevention” 경제위기 대응과 예방

임원혁,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

- 대공황과 이후의 경제위기들을 통해 도출된 네 개의 정책 시사점은 현재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함.
 - 첫째, 한 국가가 다른 통화를 부채로 빌려오는 ‘원죄’ 해결을 위한 준비통화에의 접근 제한, 둘째, 부채청산 쇼크(deleveraging shock) 대응을 위한 총수요 확대, 셋째, 부실채권 증가 해결, 도덕적 해이 완화를 위한 부채 조정 등과 더불어 효율성 개선과 가격 및 생산성 수준 변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함.
- 1972, 1980, 1997년 세 번이나 금융위기에 처한 한국은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통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피하는 모범 사례를 남길 수 있었음.
 - 세 번의 위기에서 한국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이 400%를 넘고 평균 이자보상비율이 100%에 달하는 등 심한 경제적 위기를 겪었음.
 - 하지만 1997년 위기 이후 시장신호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규제 마련,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외환보유액 축적, 부실채권 관리, 도덕적 해이 완화 등을 목표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
 - 부채 조정과 거시경제 확대의 병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한편, 건전한 금융 환경의 토대를 마련하였음.
- 유럽 지역 내 중소 국가임에도 그리스의 국제적 채무는 유럽의 주요 금융 기관들의 지불능력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기구에까지 타격을 입힐 수 있어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함.

- 현 유로존 금융위기 국가 GIPSI*에서 그리스를 제외한 국가들은 비교적 재정이 안정되어 있었음을 감안할 때, 통화 연합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 이에 대한 잘못된 정책 처방 등이 심각한 상황을 촉발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GIPSI: 국가부채로 재정위기에 처한 유로존 5개국의 머리글자를 딴 피그스(PIIGS)에서 재정난 위기를 가장 먼저 표출한 그리스의 배열을 제일 앞에 둔 용어임. 즉, 그리스(G), 아일랜드(I), 이탈리아(I), 포르투갈(P), 스페인(S)를 일컫음.

- 채무국인 그리스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임금 삭감과 생산성 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채권국이 지원하지 않으면,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일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이는 유럽 단일화 프로젝트(European Project)에 큰 충격을 미칠 것이며, 서로 긴밀히 연결된 금융 시스템뿐 아니라 역내 평화와 번영에도 타격을 줄 것임.

□ 따라서, 유로존 국가들은 위에서 언급된 네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현실화하기 위해 자원 유동성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정책을 시정해 나가는 데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임.

- 유럽중앙은행(ECB)을 모든 유로존 국가의 최종대출자로 정해 다른 통화를 빌려오는 '원죄'를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채무국에 지속가능한 개혁과 성장 전략을 도입해야함.
- 또한 확장적 긴축(expansionary contraction)을 지양하고 성장과 고용을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함.
- 무엇보다 역내의 부채 조정 전략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함.

세션 4. 토론 요약

- 경상수지 불균형은 글로벌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세계경제 상황에서 자산 흐름에 불과할 수 있음. 자산 흐름은 향후 중국 경제가 선진화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가 구축되고, 미국의 금융 산업 개혁이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현상임.
- 경제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방안으로 중국의 소비 진작보다 투자 확대나 공고한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제안하는 견해에 반대함. 세계 경제는 지난 15년 간 중국의 급격한 소비 증가로 발전해옴.
- 한편, 중국과 미국을 양축으로 발생한 글로벌 불균형은 중국 경제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과도한 비중에서 기인함.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중국의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해, 정부주도의 투자를 넘어 사기업 차원의 자발적 투자가 촉진되어야 함.
-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중국 위안화 절상에 대한 의견은 분분함.
- 2012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긴축재정정책을 도입한 정권은 교체됨. 이에 따라 2013년 유럽의 재정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글로벌 불균형과 관련해 아시아 정부 인사와 논의해 보면, 대다수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무역을 통한 해결보다는 아시아 국가들의 자체적인 투자촉진 등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해결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기축통화인 미국달러의 위상으로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은 심각하게 취급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세계경제의 불안 요소로 지목되어 온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 경제체제를 재편할 때, 비로소 세계경제는 더블딥의 반복 없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음.

세션 5. Prospects of Asia as the global engine of growth 세계성장 동력으로서의 아시아 전망

“Gender 'Rebalancing' in China: a Global-level Analysis” 세계적 관점에서 살펴 본 중국의 성별 재조정

제인 골리, 호주국립대학교 중국연구소 어소시에이트디렉터

- 중국의 출산 성비 불균형이 해소되면 궁극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0년간 높아진 중국의 성비 불균형은 광범위한 경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
 -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남성들의 높은 혼인 비용 마련을 위해 저축률이 과도하게 증가
 - 정부에 대한 미혼 남성들의 불만과 범죄율이 높아짐.
- 중국의 성비 불균형이 2030년까지 인구변화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글로벌동적모형(global dynamic model)을 사용해 예측
 - 출산 성비를 조정할 효과적인 정책이 없는 한 미혼의 비숙련 노동자인 결혼 적령기 남성의 비율은 2030년에 25%에 다다를 것으로 보이며, 총 인구의 성비 불균형이 해소되는 데에 몇 십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성비 불균형 해소는 저축률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 경제성장 둔화를 야기하지만, 이는 미혼 남성들의 범죄율 저하에 따른 편익으로 상쇄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Challenges to Asia's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아시아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과제

이종화,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 아시아 국가들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취약성을 극복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견인할 요소들을 확대함과 동시에 성장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현재 유로존 경제 위기와 미국 노동시장의 더딘 회복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성장은 둔화되었으며, 불확실성 또한 증대됨.
 - 선진국 경제성장과 고용률 감소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선진국 수출이 감소하면서 해당국가들의 경제 성장 또한 둔화되는 양상
 -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됨에 따라 각국의 금융시장 또한 세계 경제 흐름에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세계 경제 둔화 시 개발도상국으로의 자금유입 또한 불안정하게 되었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강하고, 균형 잡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외부요인과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고, 금융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발전된 거시적 자문을 제공하고 자산가격과 금융시장 안정을 포괄하는 화폐정책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할 것임.
 - 각 국가들은 자국 내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고 기업 투자를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균형 잡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다 합리적인 국내 산업과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교육, 기관의 품질, 리서치 및 개발 관련 정책개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세션 6. Progress in Asian economic integration and its prospects

아시아 경제 통합 현황과 전망

"Asian Economic Integration: Challenges and Prospects"

아시아 경제 통합: 과제와 전망

마사히로 카와이,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원장 겸 CEO

- '아시아 시대(Asian Century)'를 맞이해 한국, 중국, 일본, ASEAN이 아시아 내 경제·금융 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아시아 내 경제적 통합은 1)무역과 투자 통합 2)화폐와 금융 통합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 무역 및 투자 통합과 관련해, 현재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무역 및 투자 통합을 위한 협정이 진행되고 있음.
 - RCEP와 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연합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며, 두 협정은 궁극적으로 통합될 것으로 기대
 - 이를 위해서는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이 무역·투자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미국은 중국을 믿을 수 있는 무역·투자 파트너로 받아들여야 함.
- 화폐 및 금융 통합과 관련해, 아시아 지역 내 거시경제적 안정 및 금융 안정을 위한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한·중·일 금융협력과 역내 통화 협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역내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아시아판 IMF와 같은 차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 기금(CMIM)을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아시아통화기금(AMF)를 출범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환율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한·중·일 원화·위안화·엔화 무역결제, 외환보유고의 상호 간 국채 구성 등을 통한 3자 간 통화 협력 등 국가 간 환율정책 조율이 필요하며, 역내 환율 유연성을 확대해 나아가야 함.

- 부분적인 아시아 통합체를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연결과 무역 자유화, 다양한 포럼, 국제회의 등을 통한 상호 교류 강화가 필요함.

“Asian Economic Integration: India and PRC” 아시아 경제 통합: 인도와 중국

칼리아파 칼리아한,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 본 연구는 인도와 중국 상호 간 무역과 투자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아시아 경제통합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함.
-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에도 빈곤선 아래 인구 비율이 높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지역 내 빈곤퇴치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함.
 - 현존 기술은 경제성장과 빈곤강화를 초래하는 환경악화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초래하였음.
 - 아시아 내 국가들 간 기술진보 격차가 크고 기술 전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자본도 부족함.
 - 무역과 투자를 통해 아시아 내 국가들의 경제 연합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에 바탕한 경제성장을 통해 아시아 내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 무역과 투자를 통한 인도와 중국 간의 경제 연합은 아시아 국가 간 경제 연합의 좋은 사례임.
 - 인도와 중국은 1984년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2010~11년 인도의 중국 수출은 116억 달러, 수입은 435억 달러에 달함.
 - 인도는 경쟁우위에 있는 IT서비스와 의약분야를 중국에 직접 투자(FDI)했으며, 중국은 인도에 장비, 에너지, 재생에너지, 통신 등과 관련된 투자(FDI)를 진행했음.
- 지속가능한 경제 연합을 위해서는 불신 해소를 위한 상호 간 이해 증진 노력이 필요함.
 - 인도와 중국의 경우, 지역적, 세계적인 측면에서 관심사를 공유함으로써 경제협력을 지속할 수 있었음.

“Progress in Asian economic integration and its prospects” 아시아 경제 통합과 앞으로의 방향

김화 림, 말레이시아 페낭연구소 연구위원

- 경제 연합과 더불어 금융연합을 통해 아시아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야 함.
- 아시아의 경제 연합은 EU와는 달리 정치적, 화폐적 연합은 배제했으며, 아시아의 경제성장은 무역자유화, 인프라 개발, 해외자본유치 등에 바탕한 수출을 통해 이뤄져 왔음.
 - 유럽과 미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로 아시아 국가들이 수출의 존적인 경제에서 벗어나 역내 수요를 증가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금융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아시아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역내 금융통합을 이뤄내야 함.
 - 현재 역내 금융통합이 원활치 않아 금융관련 거래량이 낮고 관련 비용도 높음.
 - 미국의 일평균 자본 거래량은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의 5.7배
 - 아세안 거래소 링크(ASEAN Exchanges Link)를 통해 국경 간 거래를 통해 자본시장을 연결했으나 거래량이 낮고 관련 비용이 높음.
 - 아시아 채권시장은 1997년 이전에 비해 크게 발전했으나 여전히 국경 간 거래비용이 높고, 2차 시장의 유동성이 낮으며, 투자가능 채권 또한 부족함.
 -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역내 금융통합을 통해 금융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관리감독 문제, 법적구속 문제, 소통(언어)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

“Trade Liberalization, Growth, and Bi-polarization in Korean Manufacturing: Evidence from Microdata”
한국 제조업을 통해 살펴 본 무역자유화, 성장 그리고 소득양극화

한진희, 가천대학교 교수

- 1990년 초반 이후 한국 제조업 공장 단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무역자유화가 생산성 및 성장, 소득양극화에 미친 영향을 검토
 - 기존 연구들에서는 개방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론이 불분명하거나, 공장 단위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과 메커니즘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가 명확치 않았음.
- 본 연구에서는 무역자유화가 한국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반면, 소득양극화를 초래하기도 했음을 증명
 - 새로운 시장, 상품, 기술 습득을 가능케 한 무역자유화는 R&D투자와 제품 혁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음.
 - 반면, 공장 간 생산성 격차를 확대하고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발생시킴으로써 소득양극화를 초래했음.
- 연구결과를 통해 무역 자유화 확대가 필요하며, 소득 양극화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음.
 -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역 자유화 확대가 필요하며, 이는 경쟁 정책, 노동시장 정책, 복지와 부의 재분배 정책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책 내에서 이뤄져야 함
 - 무역자유화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는 사회적으로 큰 이득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음.